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한끼 식대 2700원…김밥도 못사”

20일 국회 앞 모여 투쟁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도 사람…소모품 취급 그만하라” 내달 총선 앞두고 4대 정책요구안 발표

서울 지역 대학교 청소·경비·주차·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고물가에도 용역업체들이 임금 인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식대는 인권의 문제”라며 시급 2700원 인상, 식대 2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급과 식대 인상은 물가 폭등의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비용”이라며 “그저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생계 비용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최악의 양극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은 청소노동자 문유례씨는 “새벽에 나와 전날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변기, 세면대며 바닥까지 닦다 보면 한겨울에도 땀이 흐르고 허기가 진다. 아침을 먹어야 오전 일을, 점심을 먹어야 오후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는 “하루 두 끼를 먹어야 하는데 한 달에 식대는 12만원을 받는다. 2020년에 2만원 올라서 지금까지 5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는 그사이 무섭게 올랐다”며 “한 끼에 2700원으로는 김밥 한 줄도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발언에 나선 경비노동자 김인기씨도 “주간, 당직, 비번으로 일하기 때문에 신체리듬이 망가지고, 수면의 질도 낮다. 그래서 밥이

중요하다”며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밥 먹기가 쉽지 않고, 편하게 먹을 곳도 없다”고 했다.

그는 “요즘에는 여기에 격정이 하나 더 생겼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더 빠듯해졌는데, 식탁 물가는 더 올랐기 때문”이라며 “교내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 지역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해 ▲용역·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책임 분명히 할 것 ▲근속, 연차휴가 등 포괄적 고용승계 법제화 ▲원청 시설 사용권 보장, 사위시설 등 휴게공간 개선 ▲작은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 등의 총선 4대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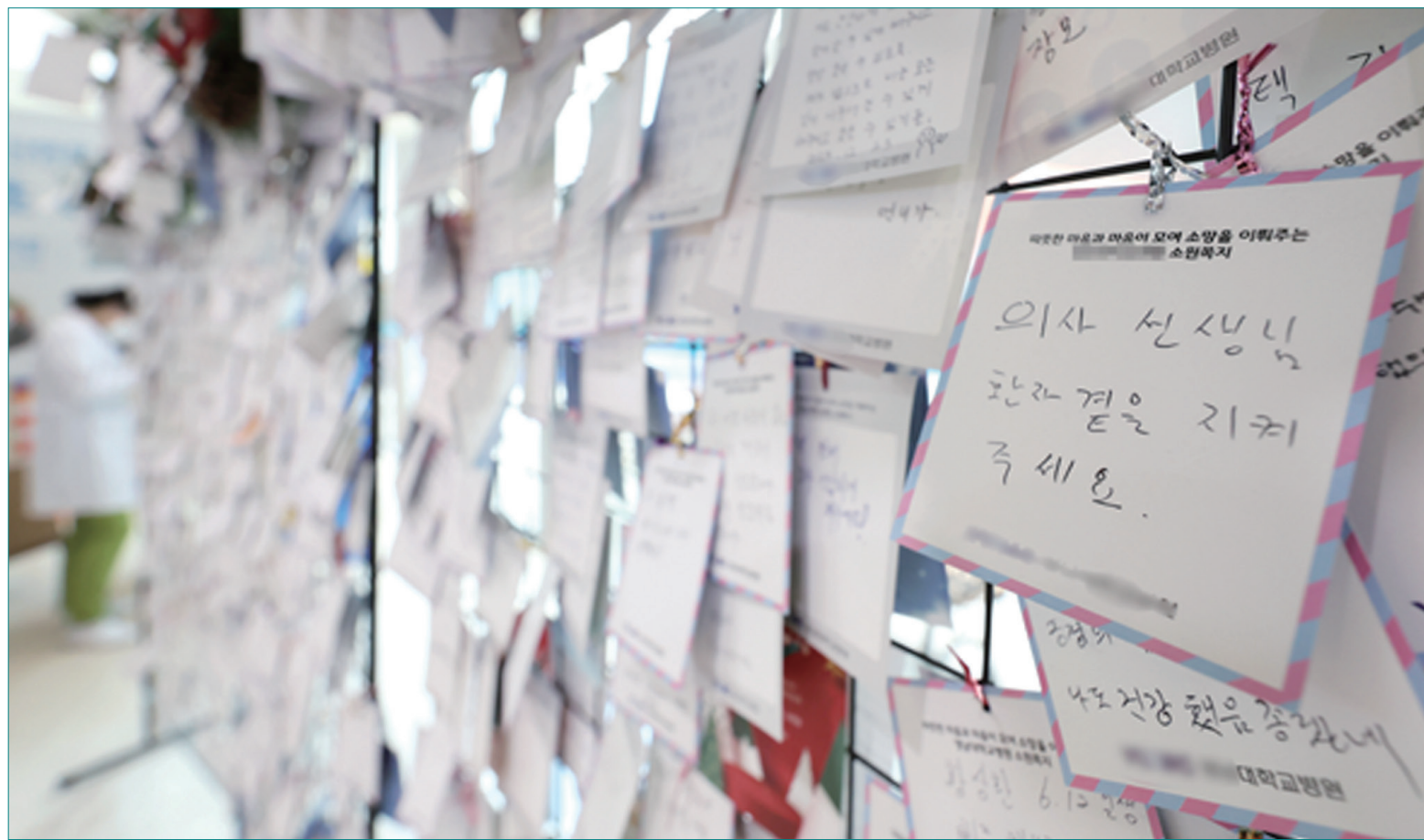
앞서 노조는 서울지역 14개 대학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해 해당 대학에서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17개 용역업체와 집단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2024년 임금 요구안으로 기본급 5700원 인상, 식대 2만원, 상여금 25만원 인상을 제안했으나 용역업체 측이 기본급 500원 인상, 식대·상여금 동결 임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



서울 지역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도 사람이다. 소모품 취급은 이제 그만하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서울 지역 대학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각 대학별 조합원 피켓팅, 요구안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선욱 기자



대학병원 소원쪽지에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 주세요”라는 소원쪽지가 붙어 있다.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 등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1층 로비에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라는 소원쪽지가 붙어 있다.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아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한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범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감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공범들과 수임하려고 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고, 원심 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해 실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이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5월 독일에서 펜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kg(도매가 1억9246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포 밀수입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던 A씨는 중학교 동창 B(19)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하는 등 공모했다고 한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19일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가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월28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김수권 기자

전국 각지 노인 상대 상습 절도한 50대 여성

화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전남 화순과 광주·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12차례에 걸쳐 노인들을 상대로 24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노인들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인들에게 말을 붙이며 친근하게 다가가 방심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절도 범행을 하다 수감돼 1년여 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사건에 엄정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은 소지품을 잘 챙기고 주변 노인들을 잘 살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순=박순철 기자

‘먹통 재발방지 노력’ 강제조정에 카카오 이의…재판행

법원, 지난 6일 항소심 앞두고 강제조정 법원 “카카오, 재발방지 위해 노력하라” 카카오, 전날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난 2022년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강제 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인 카카오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결국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부에 ‘조정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 6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뉴스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국민들과 소비자들, 자영업자들에 의해 큰 기업인데 폐쇄적이고 생각돼 항소심까지 가서 바로잡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항소심에 앞서 진행됐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이 강제조정제에 이의신청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서민위와 소비자들은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버가 즉각 돌아가도록 재해 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서버를 SK C&C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이원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에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전 국민의 일상이 멈추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2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부는 지난 6일 서민위 등이 카카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10월15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MLB 서울 개막전 폭탄 테러 협박

“폭탄 테러 오다니 쇼헤이 해치겠다”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 고척스카이돔(고척돔)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고척돔에 고성능 폭탄을 테러로 로스 엔젤스(LA) 다저스 소속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 등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벤쿠버 총영사관 직원이 해당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로 쓰인 이 메일은 한 페이지 분량이며, 메일 발송지는 일본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폭발물 감지 등에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척돔에 기존 경비 인력 외에도 추가 인원을 배치했고, 순찰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